

尹, 개각 검토...문체부 등 3~4개 부처 거론

총리실 업무평가에다 공직기강비서관실 별도 평가 내년 설 지나 1월 중후반에...尹정부 출범 8개월 만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임기 2년차를 맞아 1기 내각에 대한 개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양 산업자원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인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최근 각 부처 장관에 대한 업무 평가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이 실시하는 부처별 업무 평가와는 별개다.

1기 내각 교체 대상은 공직기강비서관실 평가서와 총리실 업무평가 그리고 21일부터 시작되는 부처업무 보고를 근거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각 부처로는 업무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우선 거론된다. 이영 중기장관의 경우 내각 내 여성 비율 등을 따질 경우 제외될 가능성은 있다.

차관급 중에선 이해총동과 '누나 찬스' 논란을 빚은 백경란 질병청장이 거론됐는데, 윤 대통령은 코로나 대응 등 업무의 긴급성을 고려해 지난해 곧바로 지역미 한국과스퇴르연구소장을 내정했다.

정치인 출신도 교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경우 국민의힘 전당 대회를 염두에 둘 경우 교체해줄 가

능성이 있다. 다만 대통령실 일부에서는 현재도 당대표 후보가 많고 권영세, 원희룡 장관이 전대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지에 대해 불명확한 만큼 큰 문제가 없었던 부처를 건드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개각과 관련해 최대 관심 대상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다.

두 사람 모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은 초기 대응 미흡 등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책임론과 야당의 탄핵소추 추진 등으로 교체에 이르게 지속적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을 교체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을 교체하더라도 경찰 특별 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 중간수사 결과 발표와 국정조사를 지켜본 후가 '자진사퇴' 형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

은 야당의 공세에 밀려 바꾸는 형식은 안된다는 생각이 강한 걸로 안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말실수 논란이 이어져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나 총리의 경우 국회에서 표결로 인준안이 통과해야 하는 만큼 후임을 찾기 쉽지 어려운 점을 고려,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개각 시기는 내년 설이 지난 1월 중후반쯤으로 점쳐진다.

부처업무보고가 진행되는 중에 장관을 교체하기 어렵고 특수부의 중간 수사 결과도 지켜봐야 해서다. 또 윤 대통령 외교 일정도 준비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은 지난 11월 8일 이후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출범 6개월만에 완성됐다. 개각이 1월 중후반에 이뤄지면 출범 8개월 만에 2기 내각이 출범한다. /뉴스

“이재명 중심 강한 야당, 힘 보낼 것” 민주 복당 박지원 “김대중 창당 당서 정치 인생 마무리”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본인의 더불어민주당 복당 결정이 이뤄진 데 대해 “이재명 대표 중심 강한 야당, 통합 화합하는 야당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박 전 국정원장은 19일 페이스북에서 복당 결정 소식을 들었다면서 “당원 여러분, 당 지도부, 민주당의 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당의 요청과 저 자신 역시 김대중 대통령이 창당한 당에서 마지막 정치 인생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복당을 희망했다”고 했다.

그는 “일부 염려가 있었다는 것도 잘 안다. 보내주신 그 사랑과 염

려에 누가 되지 않도록 잘 하겠다”며 “저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데 벽돌 한 장이라도 놓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박 전 국정원장 복당을 결정했다.

지도부 내 이견 대립은 있었으나, 이 대표가 대통합 차원에서 복당 승인을 제안했고 이를 최고위원들이 존중했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뉴스



전남개발공사 ‘공공주택사업’ 첫 진출 지역소멸 대응...시·군과 5~6개 후보지 발굴

전남개발공사가 2024년 설립 이후 주택사업 부문에서 벗어나 ‘공공주택사업’ 분야에 처음으로 진출한다.

전남개발공사는 주거안정을 통한 인구유입 활성화를 위해 시·군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공공주택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공사는 지난 11월 장흥모사장 취임이후 전남의 청년인구 유출과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전략을 준비해 왔다.

설립 이래 처음으로 진출하는 ‘공공주택사업’ 분야도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공사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최근 ‘공공주택사업 전담(TF)팀’ 조직을 별도로 꾸리고 임대·분양 형태의 주택공급 등을 통한 공익적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우선 전남 시·군과 후보지 5~6

개를 발굴하고 후보지별로 30~50가구 규모의 청년·신혼부부 전용 공공주택 공급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개발 중인 광양·담양 등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공사는 해당 사업지구에 공공주택사업 확대를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공익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지역 주거복지 환경 개선을 통해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촉진시킬 노후화된 마을주택을 정비하는 ‘소규모 주택사업’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장흥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청년주택, 마을정비사업 등 전남 시·군이 추진하는 정책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해 인구소멸 위기 등 전남의 현안 해결에 공공 부동산개발자(디벨로퍼)로서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전남학생의회 ‘학생자치 예산 확보·무상우유 개선’ 제안

전남학생의회가 정기회를 통해 ‘학생자치 예산 확보’와 ‘무상우유 급식 개선’ 등을 교육정책 제안 안건으로 채택했다.

전남학생의회는 전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 4기 전남학생의회 하반기 정기회를 열고 ‘학생자치 예산 확보 의무화’ 등 6건의 안건을 채택했다고 19일 밝혔다.

의결된 정책은 ‘학생자치 예산과 회장 공약이행비 편성 의무화’와 ‘연간 장학금 지급 계획 학교 사전 공개’이다.

또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확대’ ‘전남형 청소년증 발급 및 사용 대중화’ ‘진로진학 지원 강화’ ‘무상우유 급식 개선’ 등을 의결했다.

앞서 전남학생의회는 온라인 등으로 교육정책 의견을 수집했으며 5개 권역별 대면 토의·토론을 거쳐 6건의 정책제안을 채택했다.

전남도교육청 황성환 부교육감은 “전남학생의회가 내놓은 정책제안을 검토해 탄탄한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학생의회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전남도교육청 학생의회 구성·운영 조례’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총 66명으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세계적 에너지 위기와 새정부의 전력 정책 평가 토론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세계적 에너지 위기와 새정부의 전력 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野3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개문발차...일정 등 단독의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9일 여당의 불참 하에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현장조사·기관보고 일정 등을 의결했다. 다만 청문회에 부를 구체적인 증인 명단은 여야 간사가 협의하며 추후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야당은 국민의힘의 조속한 복구를 요구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남은 활동기간이 매우 부족하지만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현장조사 2회, 기관보고 2회, 청문회 3회를 실시하기로 했

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조특위 위원들은 오는 21일 참사 현장·이태원 파출소·서울경찰청·서울시청을 방문하기로 했다. 오는 23일 용산구청·행정안전부를 방문한다. 같은 달 27일엔 국무총리실 등 8개 기관과 29일 서울시청 등 10개 기관의 기관 보고를 받는다.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청은 양일에 모두 출석하기로 의결했다.

국조특위는 기관보고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국무총리실의 방규규 국무조정실장, 대검찰청의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 등 44명을 증인으로 특정해 의결

했다.

청문회는 내년 1월 2, 4, 6일 진행한다. 다만, 청문회에 부를 증인에 대해 우의원은 “청문회를 실시하되 구체적인 증인·참고인 명단은 여야가 협의해 추후 의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장재영 정의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기관 증인, 청문회 증인은 여야 간 협의 계속해서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이 불참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전남도당 지역혁신 정책기획단 출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19일 도당 회의실에서 ‘남도 지역혁신 정책기획단’ 공식 출범식을 갖고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기획단은 전남도당 정책실 산하한시적 특별기구로 2년 여간 운영하며 조성철 도당정책실장이 단장을 겸임한다.

전남도의회와 시·군 의회 소속 30~40대 청년·여성 그룹, 지방자치와 혁신정책 전문가그룹 등 20여 명의 위원들로 구성해 출범시키고 추후 위원들을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기획단은 남도의 새로운 활력과 활로를 창출하는 혁신적인 정책개발을 통해 남도의 지역혁신을 촉진하고 토론회 등을 추진한다.

기획단에 참여한 위원 모두 1개 이상의 정책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남도의 현안 관련 정보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한 뒤 전남도당 소속 관계자들과 공유한다.

전남도당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본산인 전남지역 정치의 환골탈태를 위해서는 정책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젊은 정치인들의 성장이 시급하다”며 “신정훈 도당 위원장 출범 이후 추진하고 있는 전남형 기본소득 특위와 기획단의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與 전대를 ‘당심 100%’로 개정...결선투표제 도입

이준석계 허은아·김용 반발 “작전하듯 룰 변경”

국민의힘 지도부가 19일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비율을 100%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내 일부에선 룰 개정의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반발하고 나섰다.

차기 당권 도전을 선언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원 투표 100%로 당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요구가 당내에 강하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듯 당원과 국민들의 의견 수렴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여야만 했는지 안타깝다”고 적었다.

앞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당권 개정안과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개정안을 비대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해 상임전국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윤 의원은 “제가 룰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저 개인의 유불리 때문이 아니다”며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與, 골대 옮겨 골 넣으면 정정당

당한가’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비판의 뜻을 내비쳤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차기 전당대회와 관련해 ‘당원투표 100%가 낫지 않나’라고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경선개입은 심각한 불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분류되는 허은아·김용 의원도 비대위를 개정이 전당대회에서 국민 여론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김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비대위가 작전하듯 전대 룰을 변경했다”며 “룰 개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뉴스

“예산안, 대통령실 눈치만...협상 임하라” 박홍근 “與 협상 전권 안 주고 주문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년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 처리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말고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정부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1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민생 예산을 위해 대응적 결단을 내렸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대통령실 눈치만 살피면서 조부자 감세만 신주단지처럼 끌어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을 파국으로 모는 예산안 표류는 끝나야 한다”며 “여당은 대통령실 하명만 기다리는 무기력한 식물 여당인가. 이제 책임 있게 협상에 임하라”고 압박했다.

또 “대통령도 특권 예산에 대한

집착을 거두고 민생 예산을 수용하라”며 “지금 대통령이 관심을 기울여 할 것은 여당 경선 개입이나 정적 제거가 아니라 민생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만 하면 바로 처리될 예산인데 주말 내내 오매 불망 윤심에 막혀 또 다시 헛바퀴만 돌렸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집권당이 아니라 총속당, 국민의힘이 아니라 용산의힘이라 해야 할 지경”이라며 “당정 협의에서 예산안 논의도 하지 않았는데, 대통령실은 명령만 내리면 그만이고 관철하는 건 여당 몫인가”라고 했다.

호매민평

이태원

무개념선물

악물리나? 해도너무한다

축 새해 대통령윤석열 왜? 대풍중곡산 아른도드 미국산

태헌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기 바란다

유승민 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與, 골대 옮겨 골 넣으면 정정당한가’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비판의 뜻을 내비쳤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차기 전당대회와 관련해 ‘당원투표 100%가 낫지 않나’라고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경선개입은 심각한 불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분류되는 허은아·김용 의원도 비대위를 개정이 전당대회에서 국민 여론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김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비대위가 작전하듯 전대 룰을 변경했다”며 “룰 개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뉴스